

현안 쌓였는데 국회는 거울잠… 與野, 허울뿐인 ‘민생’

노란봉투법 등 산적… 임시회 뒷전
국민의힘 전대 후보 간 신경전 과열
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여야가 올해 매달마다 임시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맞으며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공휴일인 삼일절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3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K-칩스법, 의료법 및 간호법 개정안 처리,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 방송통신위원 선출 절차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내부 잡음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 줄기인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발 찍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각각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기’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소유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의 연예인 성적대 상화 웹소설 작성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22대 총선 공천이 ‘정실공천’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 중립 규정이 있다. 이걸 어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

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식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천과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또 ‘폭망’할 것이다.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권도 다시 교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정말로 두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임명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책임 요구와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독식하는 ‘검찰공화국’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전선이 만들어진 상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非)이재명

계의 반발을 확인한 민주당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정한 ‘살생부’를 만들어 항의 전화, 문자폭탄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내 청원게시판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당과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1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

발 특혜 의혹’을 터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전 총리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이재명계 반란표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루도 뭉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며 “방탄을 희석시키고,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후 3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또 무리하게 국회를 과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막바지 與 전대…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여전

제3차 전대 수도권 합동연설회
金 “21대총선 참패 원인, 황교안”
安, 김기현 울산 투기 의혹 비판
黃 “安, 정당 설립·파괴 전문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은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현·안철수·전하람·황교안 후보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까지 정책 대결 대신 쟁점 현안을 두고 다투었다.

김기현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21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황교안 후보를 지목하며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국 선거 지휘 실패,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인사’로 규정된 뒤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내 분열을 일

으켜서 당을 망치는 분이 앞장서면 민생을 절대 해결 못 한다. (내년 총선에서도) 당을 위해 헌신한 분을 최우선으로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해명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거티브 공세 정면 돌파로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철수 후보도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 모두 갖춘 사람은 없다”며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 투기가 국민의 3대 역린이며, 총선에서 터지면 패배한다”며 김 후보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견제도 이어갔다.

황교안 후보도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그것이 진정한 당, 나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며 김 후보 비판에

집중했다. 안 후보에 대해 황 후보는 ‘정당 설립·파괴 전문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전 후보에게는 색깔론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전하람 후보는 “계파정치, 우왕좌왕, 동원 인원 앞에서 당 대표 혼자 품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다”며 경쟁 후보들의 행보를 비판한 뒤 “다시는 인원 동원 없이, 수도권 젊은 세대가 환호하고, 당원 하고 싶다고, 국민의힘에서 정치해보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3·8 전당대회는 오는 3일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까지 마친 뒤 4~5일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 모바일 투표에 미참여 책임당원은 6~7일 ARS 투표를 한다. 누적 투표 결과는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전당대회 당일 당 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가 없으면 1·2위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로 12일 최종 당선인을 가리게 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뉴시스

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 “유공자 예우”

尹정부 첫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조직법 공포안 공개 서명식을 주관하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

도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뵈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 50여명이 초청돼 서명식에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씨와 아들 강병훈씨,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귀식 경무관의 아들 최민석씨와 손녀 최현정양을 비롯해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현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 안기영씨 등 25명이 참석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기념사 비판에 “미래 보고 가야”

(3·1절)

협력 파트너 발언에 야당 등 비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한 것에 대해 야당을 비롯해 일부 역사학자·시민단체들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 “그래도 약국 국민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용산 대

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모든 것이 함께 얹혀있다”며 “어제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연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식민사관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세력이고, 또 한쪽은 어떻게든 반일감정과 혐한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국가의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대겠냐”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